



가계부채 증가 억제의 딜레마

최원 선임연구원

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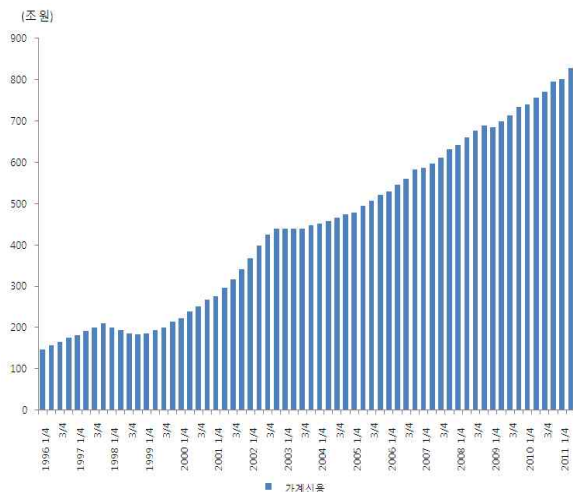
■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7월에는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높아지는 등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. 이에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. 그러나 가계대출의 풍선효과를 고려할 경우 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은 저소득 및 저신용 계층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.

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여 그 규모가 2011년 6월 말 기준 900조 원에 육박하는 등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.

-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이 876조 3,000억 원이며,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도 연평균 13%로 같은 기간 연평균 명목 GDP 성장률 7.3%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.¹⁾
-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첫째,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축소되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.
 -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9년 말 기준 153%로 이미 미국,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었으며, 2010년 말 기준으로 155%를 기록하여 더욱 상승함.
- 둘째,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택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임.
- 한편,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7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도 지난 2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(0.77%)으로 상승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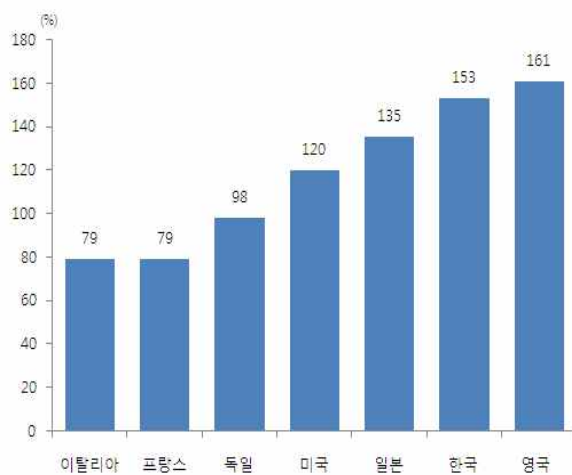
1) 연평균 증가율은 2011년 3월 말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임.

〈그림 1〉 가계부채 잔액



자료: 한국은행.

〈그림 2〉 주요국 가계부채/가처분소득



주: 2009년 기준임.

자료: 한국은행(2010. 9), 「통화신용정책 보고서」.

■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간에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.

● 정부는 2011년 6월 29일 ‘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’을 발표하면서 가계대출 건전성, 대출자 구성, 금융사 손실흡수능력, 가계 자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가계부채 문제가 관리 가능한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함.

– 단, 정부는 향후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, 취약한 대출구조, 저신용 계층 상환여력 문제 등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함.

●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,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 보강, 대출자 상환능력 확인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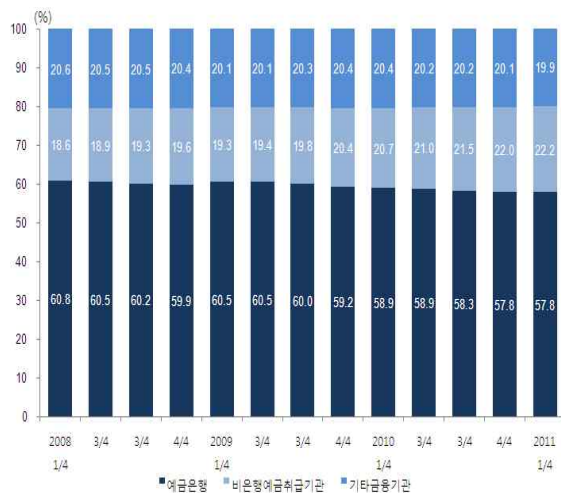
● 한편, 일부 시중은행들의 경우 대출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대출금리 인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.

■ 그러나 그 동안 정부가 시행해 온 가계대출 대책이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은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증가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었음.

● 전체 가계대출에서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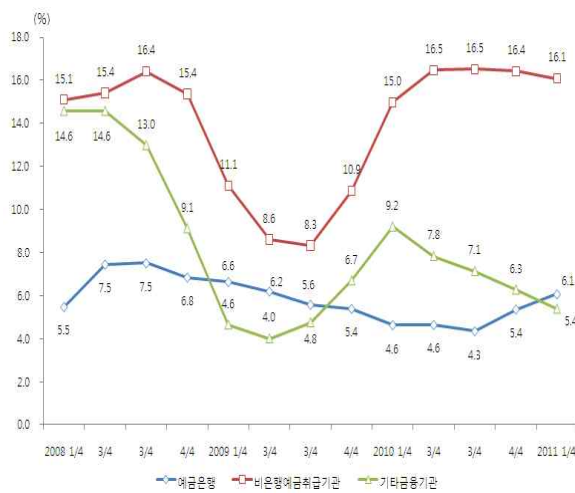
● 특히 2009년 중반 이후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로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보험 등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강하게 나타남.

〈그림 3〉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비중



자료: 한국은행.

〈그림 4〉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증가율



자료: 한국은행.

■ 이러한 풍선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대출금리 인상 및 대출제한 등의 대응책은 저소득 및 저신용 계층의 자금사정 및 이자부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.

- 향후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한 대출 수요는 저소득 및 저신용 계층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되나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이들 계층의 대출 어려움이 크게 증가할 경우 풍선효과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.
- 한국은행이 발표한 「2011년 2/4분기 가계신용」에 따르면 소득기준 하위 20%의 저소득 계층의 이자비용이 전년동기 대비 40.8%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대출금리 인상 및 풍선효과 확대 등은 이들 계층의 이자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임.

■ 가계대출 증가 억제 정책이 저소득 및 저신용 계층의 신용공급 악화와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.

-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이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저소득 및 저신용 계층의 채무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.
- 채무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 창출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, 가계부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경제여건 안정에도 힘을 기울여야 함. [kiri](#)